

투표율 상승이 민주통합당에게 이로울까?: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정당편향

지 병 근 | 조선대학교

이 연구는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한국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정당편향'(partisan bias)을 분석한 것이다.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야당, 특히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널리 수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지극히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과연 그리고 얼마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여론조사자료와 집합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예상과 달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을 선호하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당선호강도와 투표의 무감의 수준 역시 더 낮았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투표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보다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 투표율의 정당편향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할 수 있으며, 이에 의존하여 민주체제의 정치적 대표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투표독려행위를 당파적인 선거운동으로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투표율, 정당편향,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제19대 총선

I. 서론

최근 한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선거문화 가운데 하나는 일반유권자들은 물론 이효리나 김제동과 같은 유명연예인들이 SNS를 이용하여 소위 '투표인증샷', 즉 자신의 투표참여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사진을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수행한 개인의 만족감을 표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일종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공적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야당을 지원하는 일종의 정파적 행위로도 이해되면서 논란이 되었으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기까지 하였다.¹⁾

이처럼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개인의 행위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보다 투표율에 따라 개별정당의 이해득실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위 ‘투표율의 정당편향’(partisan bias)에 관한 주장이 널리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투표참여율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갈 경우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할 것이며, 결국 유권자들의 투표독려행위가 시민들의 보편적 이익인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하기보다는 민주통합당을 위한 당파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도 날씨가 굿으면 투표 참여에 덜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을 외면함으로써 공화당에게 유리한 선거결과가 빚어질 것이라는 추정이 일찍이 제기되어 왔으며, 투표율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반면 주로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표율의 제고방안에 초점을 두어왔던 한국에서는 투표율이 선거결과에 미친 편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²⁾

이 연구는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한국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정당편향을 분석한 것이다. 투표율이 상승하면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에서도 하나의 통상적 주장으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물론 유권자들의 투표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의 증감이 과연, 그리고 얼마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투표율이

1) 최근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투표촉진행위는 “불평등한 참여, 불평등한 영향력”, 즉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는 정치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투표촉진행위”(get out the vote, GOTV)와 차이가 있다. 미국의 GOTV는 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사적으로 접촉하고 차량을 제공하는 정파적 행위를 의미한다. 투표촉진행위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쟁은 투표율제고를 위한 전국유권자등록법안(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논쟁과 매우 유사한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현우(2008, 288)를 참조할 것.

2) 한국의 선거연구의 이러한 경향성은 연구자들의 무관심뿐만 아니라 투표율 관련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연구의 폭을 제한해왔다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선거연구에서 간과되어온 경험적 연구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움과 동시에, 투표참여 독려행위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선거결과와 관련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12)의 선거후 여론조사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집합적 수준의 선거결과자료를 활용하여 투표자와 기권자들의 정당선호와 투표의지에서 나타난 특성을 비교하고, 투표율의 변화가 가져올 각 정당의 득표율 증감 규모와 당선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예상과 달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을 선호하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당선호강도와 투표의무감수준 역시 더 낮았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투표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보다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 투표율의 정당편향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할 수 있으며, 이에 의존하여 민주체제의 정치적 대표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투표독려행위를 당파적인 선거운동으로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절에서는 투표참여의 정당편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옹호하는 이들의 기본가정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제III절과 제IV절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당편향에 관한 기본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디자인을 제시할 것이다. 제V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며,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투표율 정당편향연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치참여행위와 관련한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II. 투표참여의 정당편향에 관한 선행연구

1. 투표참여의 정당편향

투표율은 투표참여가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이라는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기본 덕목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투표율의 변화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는, 소위 투표율의 정당편향성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Campbell et al. 1960; Campbell 1966; DeNardo 1980; Nagel 1988; Knack 1994; Pacek and

Radcliff 1995; Nagel and McNulty 1996, 2000; Bernhagen and Marsh 2007; Gomez et al. 2007; Kaufmann et al. 2007; Hansford and Gomez 2010). 투표율의 정당편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투표자와 투표불참자의 정당선호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Hansford et al. 2010). 미국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공화당 지지자들에 비해서 투표참여율이 낮으며, 결과적으로 투표자에 비해서 투표불참자들 가운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³⁾ 따라서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민주당에게 유리한 반면, 하락할 경우 공화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우프만 외(Kaufmann et al. 2007)는 지난 2004년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수가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약 6퍼센트 더 많았지만, 투표장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1퍼센트 더 많이 나왔으며, 결국, 부시가 당선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통상적으로 투표율의 정당편향성에 관한 연구는 날씨가 투표율과 정당의 득표율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Knack 1994; Shachar and Nalebuff 1999; Gomez et al. 2007). 최근에도, 고메즈 외(Gomez et al. 2007)는 카운티 단위별 날씨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열네 번의 미국 대선(1948-2000)에서 비 또는 눈이 내렸을 경우 투표율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날씨보다는 선거구 유권자의 구성과 선거특유의 속성 등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적 조건들에 주목해왔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록 투표율의 정당편향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Erickson 1995; DeNardo 1980; Kaufmann et al. 2007; Hansford et al. 2010). 예를 들어 에릭슨(Erickson 1995)은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었던 미국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과 민주당의 득표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는 단순한 허위적(spurious) 관계일 뿐이며, 사실상 흑인들의 투표참여를 가능케 하였던 남부정치개혁의 영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에릭슨과 같이 투표율의 정당편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투표율의 영향이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혹은 선거특유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eNardo 1980; Citrin et al. 2003; Nagel et al. 1995, 2000; Martinez and Gill 2005; Hansford et al. 2010). 디나르도(DeNardo 1980)는 통상적인 인식과 달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1932-1976)에서 투표율이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3) 투표율의 정당편향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카운티, 주, 전국 단위의 집합적 수준의 역대 선거결과자료 혹은 개인수준의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한 미국 사례분석에 집중해왔다.

않았으며, 의회선거(1938-1966)에서는 오히려 투표율의 증가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원인을 ‘핵심 유권자들’(core voters)과 달리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약한 ‘주변부 유권자들’(peripheral voters)의 규모에서 찾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공황 시기 이후 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약화되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약한 주변부 유권자들의 변질이 투표율의 상승에 따른 민주당의 이익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선거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수록 투표율 상승에 의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감소한다. 설사 기권자들 가운데 민주당 선호자들이 많더라도 이들의 정당일체감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소위 ‘변절율’(defection rate)이 증가하여, 결국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스포드 외(Hansford et al. 2010) 또한 투표율의 증가가 단순히 미국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948~2000년 미국대선을 사례로 카운티 단위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디나르도(1980)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투표율의 증가가 평균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추가로 투표장으로 유입되는 주변부 유권자들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더라도 이들의 변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Hansford et al. 2010, 270). 그 외에도 이들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현상타파적인 성향이 강한 주변부 유권자들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현직자에게 부정적인 선거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투표율의 정당편향성이 제한적인 또 다른 이유로 투표불참자들의 정치적 선호가 투표자들과 거의 대등하다는 점과 정당선호도 이외의 투표결정 요인들에 주목하였다(Kaufmann et al. 2007; 이현우 2008). 예를 들어, 카우프만 외(2007)는 역대 미국선거 사례를 분석하여, 소위 투표율에 따른 정당편향, 즉 투표율이 오를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항상 타당하지는 않으며, 후보에 대한 감정이나 이슈와 같은 선거 특유의 요인들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들은 투표율의 변화 대비 득표변화를 통해 계산된 ‘반응계수’(responsiveness coefficient)를 이용하여 1972년 이후 2000년까지 하원의원선거결과를 분석하였지만 특별한 투표율 편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비록 민주당의 클린턴행정부가 정권을 잡았던 1990년대 높은 수준의 경합을 벌인 선거구에서 약간의 정당편향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투표율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켰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선거제도나 정당체제와 같은 개별 국가들의 특수역사적인 맥락을 통제하며 투표율의 정당편향성에 대한 교차국가분석을 시도하였다(Pacek et al. 1995; Bernhagen et al. 2007; Eijk and Egmond 2007). 예를 들어, 번하겐 외(Bernhagen et al. 2007)는 선거제도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의 자료를 이용하여, 25개 국가의 28개 선거를 분석하여 비록 투표율 상승이 약소정당과 야당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도좌파정당에게는 그다지 유리한 선거결과를 낳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진 투표율 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은 규범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대표성에 투표참여가 미치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투표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분석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들은 투표율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보다, 투표비용의 증가, 정당 일체감의 변화, 연령, 선거경합수준, 현역의원출마여부, 영호남지역, 도시화 수준, 선거인수 등이 투표율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왔다(황아란 1997; 2011; 김욱 1999; 김진하 2008; 김재한 2011).

국내 연구로는 거의 유일하게 투표율의 정당편향을 다룬 이현우(2008) 역시 미국선거를 사례로 삼았다. 그는 1968년 이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개최된 아홉 번의 대통령선거 사례를 분석하여, 투표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기권자의 선호편향(preference bias)이 일부 존재하지만,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자와 기권자의 평가점수를 이용하여 정당선호를 측정하였으며, 완전투표를 가정하여 선거결과와 변화 여부를 추정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규범적으로 투표불참여 민주주의 체제의 “과소대표”문제를 심화시키기보다는 “정치의 반응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⁴⁾

4) 정일권·강상구·박수진·박천규·이수원(2008)은 투표율의 정당편향이 발생하는 것은 “투표자 집단에 따라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의사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2. 투표율 변동과 정당득표

1) 투표율의 정당편향론의 기본 가정

투표율의 정당편향론을 수용하는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정당이 실제 지지율보다 낮은 수준의 득표율에 머물렀지만, 투표율이 상승하였을 경우 추가로 유입되는 투표자들 가운데 이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경쟁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보다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득표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표율의 상승이 특정 정당의 지지율과 득표율의 차이를 보전해줄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양당 간의 선거경쟁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1) 전체 100명의 유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자 수는 각각 50명(50%); 2) 투표율은 50퍼센트로 이들 가운데 50명(50%)만이 투표에 참여; 3) 양당의 지지자들 가운데 각각 30명(60%)과 20명(40%)만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결국 전체 유권자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수는 각각 20명(40%)과 30명(60%).

만약 50퍼센트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60퍼센트로 상승할 경우, 양당은 얼마나 득표에 성공할까? 이처럼 10퍼센트의 투표율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정당편향성을 옹호하는 이들은 암묵적으로 양당 지지자들 가운데 잔여투표자들, 즉 각 당을 지지하는 기권자들이 동일한 비율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각각 2명(20*10%)과 3명(30*10%)이 추가로 투표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당은 총합 32표와 23표를 얻게 된다. 투표율이 증가할수록 양당 사이의 득표율 격차는 점차 감소하며, 투표율이 100퍼센트에 이르면 양당이 동일한 득표율을 얻게 된다. 결국, 투표율의 상승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득표율은 점차 증가하며, 의석수의 변화 또한 가져올 수 있다.

2) 정당선호의 불균등성, 정당선호와 투표의지의 불일치

하지만, 정당선호, 투표율 상승에 따른 득표율 및 의석 분포방식과 관련한 정당편향성 옹호론자들의 기본 가정들이 과연 타당한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당선호의 분포와 관련하여 직관에 의존한 이들의 가정이 한국 선거정치의 맥락에서 타당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하여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들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약간 더 많으며, 따라서 전체 기권자들 가운데 투표율이

낮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일관되게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양당에 대하여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시기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기복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유사한 투표율의 정당편향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의 경우, 양당지지자들 가운데 잔여투표자들, 즉 기권자들 가운데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이 더 많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기권자의 정당선호와 관련하여 특정정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들의 가정, 즉 전체 기권자들 가운데 특정정당(a, 예: 미국의 민주당 혹은 한국의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b, 예: 미국의 공화당 혹은 한국의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더 많다($ID_{na} > ID_{nb}$)는 가정이 만족되더라도 이들의 주장처럼 투표율의 정당편향($\Delta V_a > \Delta V_b$)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당선호와 투표의사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만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투표율 변동(ΔVT)에 따라 발생하는 각 정당에 대한 추가투표규모는 기권자들 가운데 정당 a의 지지자들이 정당 b의 지지자들보다 더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ID_{na} > ID_{nb}$), 정당 a의 지지자들의 투표의사가 정당 b의 지지자들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강해야 한다.⁵⁾

실사 기권자들 가운데 정당 a를 선호하는 이들의 비율이 정당 b의 경우보다 더 크더라도($ID_{na} > ID_{nb}$), 투표율 상승을 통해 이 정당이 얻게 되는 추가득표 규모가 정당 b의 추가득표 규모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Delta V_a < \Delta V_b$). 물론 상승한 투표율(ΔVT)만큼 양당을 선호하는 기권자들의 투표참여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즉 $VT_a = VT_b$ 라면, 지지자들의 저조한 투표율로 불이익을 보았던 정당 a의 추가득표의 규모($\Delta VT_a * ID_a$)가 정당 b의 추가득표의 규모($\Delta VT_b * ID_b$)에 비해서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투표율이 증가한다고 해도 정당 a의 지지자들의 투표참여율이 정당 b의 지지자들보다 낮다면($VT_a < VT_b$), 추가득표율의 규모 또한 정당 a가 더 작을 수 있고, 결국, 기권자들 가운데 정당 a 지지자들의 비중이 높다고 해도 투표율의 증가가 정당 a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ID_{nj} : 정당 j의 지지자들 가운데 기권자; ΔV_j : 정당 j의 추가득표수; ΔVT_j : 정당 j 지지자들의 투표율.

3)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더구나 실제 득표율이 증가하더라도 의석수의 변화에 필요한 규모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Citrin et al. 2003). 정당의 득표율이 의석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들과 달리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의석배분이 주로 단순다수제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우, 투표율의 변화에 따른 의석수의 변화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체 246개의 지역구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한 후보자들 사이의 득표율 차이의 평균은 무려 16.4퍼센트(표준편차 14.2, 최소값 0.19%, 최대 66.9%)에 달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a).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득표율의 변화가 양당의 의석수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1위와 2위 후보자들 사이의 득표율 차이가 10퍼센트 미만이었던 선거구는 전체 지역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0개(43.1%), 5퍼센트 미만이었던 선거구는 50개(19.5%)였으며, 불과 2.5퍼센트 미만이었던 선거구 또한 23개(8.9%)에 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만약 투표율의 변동에 따라 이들 사이에 2.5퍼센트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발생했다면 거의 10퍼센트 가까운 지역구의 의석배분이 뒤바뀔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주요 가설

이 연구는 한국의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행태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이 가설들은 각각 정당선호와 투표 의지 등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것들과 투표율의 상승에 따라 편향적인 이득을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민주통합당의 득표율 및 의석수 분포와 관련한 것들이다.

가설 1-1. 기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

가설 1-2. 기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투표의지가 약하지 않다.

위의 가설들은 한국에서 투표율의 정당편향성 옹호론자들이 유권자들의 정당선호 및

투표의사와 관련하여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연 기권자들 가운데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들보다 더 많은지, 아울러 이들의 투표의사가 과연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대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로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권자들 가운데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들의 투표참여의사가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권자들 가운데 투표의사가 강하더라도 낮은 투표효능감이나 출근에 따른 부담과 같은 다른 요인들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을 선호하는 이들이 더 많다거나 이들의 투표의지가 더 강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령개정은 물론 실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청년유권자들의 지지를 창출하기 위한 선거공약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일부 공천하였다. 아울러, 제19대 선거에서 20~40대에 속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장승진 2012).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 기권자들 가운데 양당에 대한 선호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투표참여의지 또한 민주통합당 지지자들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가설 2-1. 투표율이 증가할수록 민주통합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증가한다.

가설 2-2. 투표율이 증가할수록 민주통합당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 증가한다.

한국에서 투표율의 정당편향성을 옹호하는 이들은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더 낮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 당의 득표율은 물론 의석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에서 민주통합당은 호남에 주요한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정당이지만, 대체로 투표율이 저조한 젊은 연령층과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고, 이념적으로 비교적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투표율의 증가가 이 당 후보들의 득표율 증가와 당선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19대

선거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소위 '20-40대'가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에 비해서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들을 포함하는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증가하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수용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대처럼 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득표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통합당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사 이들 사이에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이들의 투표의지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들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증가하더라도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IV. 연구 디자인

이 연구는 주요 가설의 타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12)의 제 19대 총선후 여론조사자료(1000명)를 이용하여 기권자들의 정당선호가 과연 특정정당에게 편향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투표의지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할 것이다.⁶⁾ 이를 위해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고 느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여 각 정당에 대한 응답자들의 정당선호와 투표참여의지(1~3: 1=낮음, 3=높음)를 각각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이 후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리 가깝게 느끼지 않을 경우는 투표의지가 약한 것으로, 매우 가깝게 느낄 경우 투표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가 밝혔듯이 정당선호와 투표참여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정당선호가 강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당선호와 투표의지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해 이 연구는 과연 투표가 “시민의 의무”인지를 묻는 질문을 이용하여 투표의지를 추가적으로 재측정하였다.⁷⁾

6) 이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국(제주도 제외) 성인 남녀 1000명을 지역, 성, 연령별로 층화추출하여 대인면접조사(2012/04/12~04/23)를 진행한 것이다.

7) 이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12)의 선거후여론조사자료에서 나타나는 투표자의 과잉응답 현상을 포함한 다양한 표본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이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a)가 제공하는 선거결과자료를 최소자승모델(OLS)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투표율이 과연 그리고 얼마나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기본모델에는 종속변수인 민주통합당의 득표율(0~100)과 당선여부(당선=1, 낙선=0), 독립변수인 투표율(총득표수*100/총투표자수)을 포함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개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수, 호남과 영남지역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투표율은 선거구별 유권자 총수 대비 유효투표와 무효투표를 모두 합한 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이처럼 유효투표만을 고려하지 않고 무효투표를 고려하여 투표율을 고려한 이유는 후자 역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편향론자들이 주장하듯이 투표율은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변수들 가운데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수는 분산효과로 인해 민주통합당의 득표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은 이 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영남지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V. 분석 결과

1. 정당선호와 투표의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12)의 여론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77.8퍼센트의 응답자가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답하였다(실제 투표율은 54.2%).⁸⁾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새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 8) 제19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각 선거구에 평균 3.7명이 출마하였으며,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는 9명이 출마한 전남 여수시갑 선거구였다. 후보자들의 평균 득표율은 16.6퍼센트였다. 강원과 경북, 인천이 각각 19.3퍼센트, 18.8퍼센트, 18.7퍼센트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나타낸 반면, 충남은 12.7퍼센트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230개 선거구, 민주통합당은 209개 선거구, 진보당은 52개 선거구에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득표율은 각각 45.6퍼센트, 44.2퍼센트, 27.9퍼센트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출마한 지역은 모두 194개 선거구이며, 양당 가운데 한 정당만 출마한 선거구는 모두 51개 선거구였으며, 광주 동구는 양당 모두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통계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1〉 정당선호와 투표참여

선호정당	투표	기권	전체	Pearson χ^2 (4)
새누리당	86.1(260) 49.2	13.9(42) 48.8	100.0(302) 49.1	2.76
민주통합당	85.0(209) 39.5	15.0(37) 43.0	100.0(246) 40.0	
전체(양당)	85.6(469) 100.0	14.4(79) 100.0	100.0(615) 100.0	

괄호 안의 수는 사례수, ** 유의도 = 0.01; 다른 정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략함.

자료 출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2012.04)”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고 느끼는 정당”이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30.2퍼센트와 24.6퍼센트였다.⁹⁾

〈표 1〉은 정당선호를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제외하고, 양대 정당을 선호하는 이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 혹은 기권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¹⁰⁾ 이 표에 잘 나타나듯이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이들 가운데 86.1퍼센트가 투표한 반면, 민주통합당 선호자들 가운데에는 이 보다는 약간 작은 85.0퍼센트가 투표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는 비록 새누리당 선호자들보다 민주통합당 선호자들의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인식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들 사이에 투표율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선거통계시스템(2012a)에서 찾을 수 있다.

- 9) 투표참여에 대한 과잉응답의 수준이 연령뿐만 아니라 선호정당별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투표율이 낮은 집단, 특히 세대격차(generation gap)가 심화된 이번 선거후여론조사에서 야당지지 성향이 강한 40대 이하의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투표자들의 비율과 서베이에서 나타난 투표응답자 비율의 격차에서 볼 수 있는 과잉응답률 문제에 대해서는 이갑운(2008), 홀부룩과 크로스닉(Holbrook and Krosnick 2010)과 이현우·전시홍(2010)을 참조할 것.
- 10)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12)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19대 총선의 지역구 투표에서 새누리당은 47.5퍼센트, 민주통합당은 43.3퍼센트, 통합진보당은 3.8퍼센트를 얻었으며,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이들은 각각 46.9퍼센트, 39.7퍼센트, 7.7퍼센트를 얻는데 그쳤다. 이들의 후보가 출마한 지역만을 고려해보면 실제 지역구선거에서 평균 45.6퍼센트, 44.1퍼센트, 27.9퍼센트를 얻었으며, 실제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각각 42.8퍼센트, 36.5퍼센트, 10.3퍼센트를 얻었다.

〈표 2〉 투표여부에 따른 선호정당에 대한 친근감

투표 여부	선호정당	매우 가깝다	어느 정도 가깝다	그리 가깝 지 않다	Pearson chi ² (2)	투표는 의무	투표는 의무 아님	Pearson chi ² (1)
투표	새누리당	23.7 (59)	66.3 (165)	10.0 (25)	19.35**	83.7 (216)	16.3 (42)	3.16
	민주통합당	11.4 (23)	66.7 (134)	21.9 (44)		89.4 (186)	10.6 (22)	
	전체	17.7 (90)	66.6 (339)	15.7 (80)		86.3 (402)	13.7 (64)	
기권	새누리당	11.9 (5)	61.9 (26)	26.2 (11)	3.37	56.1 (23)	43.9 (18)	0.43
	민주통합당	8.1 (3)	46.0 (17)	46.0 (17)		48.7 (18)	51.4 (19)	
	전체	9.3 (8)	54.7 (47)	36.1 (31)		52.6 (41)	47.4 (37)	

괄호 안의 수는 사례수, ** 유의도 = 0.01

자료 출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2012.04)”(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각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율뿐만 아니라, 전체 응답자의 22.2퍼센트에 해당하는 전체 기권자들 가운데 양대 정당 지지자들의 분포는 투표율의 정당편향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위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표자들 가운데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다른 정당들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이들의 비율이 각각 49.2퍼센트와 39.5퍼센트였으며, 기권자들 가운데에서도 48.8퍼센트가 새누리당을, 43.0퍼센트가 민주통합당을 가깝게 느낀다고 답하였다.¹¹⁾ 이와 같은 양대 지지자들의 분포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기권자들 사이에 민주통합당을 선호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인식에 반하는 것이다.¹²⁾

잠재적인 투표의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 정당선호의 수준을 보더라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정당선호수준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당선호수준보다 현격히 높다.¹³⁾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투표자들 가운데 새누리당을 ‘매우 가깝게’ 느끼는 이들이 차지하

11) 그 이외에 통합진보당(1.3%)과 자유선진당(0.9%)은 불과 1퍼센트 내외의 응답자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데에 그쳤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이 높은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더 많았다. 기권자들 가운데 대부분(61.3%)은 어떠한 정당에도 선호를 나타내지 않았다.

12) 이는 투표자와 투표불참자 사이에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선호가 크게 차이가 없는 미국 유권자들의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Kaufmann et al. 2007, 154).

13) 투표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정당에 대한 친근감과 투표의무감 등 두 가지 변수와 투표참여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각각 0.17(정당친근감*투표여부)과 0.32(투표의무감*투표여부)였다.

는 비율(23.7%)은 민주통합당에게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이들(11.4%)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많다. 반면, 양당에 대하여 “그리 가깝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민주통합당 지지자들(21.9%)이 새누리당 지지자들(10.0%)보다 더 높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 비해 지지정당에 대하여 느끼는 높은 친근감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기권자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권자들 가운데 지지하는 정당에 대하여 “매우 가깝다”고 느끼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새누리당 지지자들(11.9%)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8.1%)보다 높았다. 반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하여 “그리 가깝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민주통합당 지지자들(46.0%)이 새누리당 지지자들(26.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투표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권자들 가운데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정당선호수준이 이처럼 일관되게 민주통합당 지지자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대립하는 것이다.¹⁴⁾

기권자들의 투표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지표인 투표 의무감의 정당별 분포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위의 <표 2>에서 나타나듯이 투표자들의 경우,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가운데 투표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89.4%)이 새누리당 지지자들 가운데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의 비율(83.7%)보다 더 높았다. 반면, 기권자들의 경우는 새누리당 지지자들(56.1%)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48.7%)보다 투표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만으로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새누리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정당일체감 이외에도 기권자들이 투표할 후보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부의 선행연구들은 주요변인들을 포함한 투표선택모델을 활용하여 투표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각 후보 및 정당에 대한 투표 가능성 혹은 득표율을 추정하였다(Citirin et al. 2003; Martinez et al. 2005; Hansford et al. 2010).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 또한 투표자와 투표불참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각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표율의 상승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14) 정당선호와 관련된 이 질문에 대하여 무응답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투표자의 32.0퍼센트와 투표불참자의 61.3퍼센트에 달하였다. 이는 투표불참자들의 정당선호가 투표자들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 약한 것을 보여준다.

있다(Bernhagen et al. 2007; Hasford et al. 2010, 269).¹⁵⁾

2. 투표율과 정당득표율

민주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 246개의 선거구 가운데 209개의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켰다. 전남과 전북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출마시킨 것은 물론 영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자당의 후보자들을 출마시켰다(부록 1 참조). 이들이 평균적으로 얻은 득표율은 44.2퍼센트였으며, 이는 230개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킨 새누리당의 평균 득표율인 45.6퍼센트보다 약간 낮았다. 전국적으로 민주통합당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린 선거구는 광주광역시에서였으며, 평균 62.0퍼센트를 득표하였다. 전남과 전북에서도 민주통합당은 평균 50퍼센트를 넘는 득표를 얻었다. 새누리당과 경합이 벌어진 수도권에서도 이 당은 50퍼센트에 조금 못 미치는 평균 득표율을 나타냈다. 반면, 소위 낙동강 벨트를 주창하며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들을 출마시켰던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 민주통합당은 평균 4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민주통합당은 경북에서도 전체 15개 선거구 가운데 11개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켰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13.0퍼센트만을 득표하는 데 그쳤다.

〈표 3〉은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분석단위는 개별 지역의 선거구이다. 이 표의 모델 1은 민주통합당 혹은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모두 포함한 반면, 모델 2는 양당의 후보가 모두 출마하여 경합을 벌인 선거구 사례에만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각 모델에는 투표율과 함께 통제변수로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수와 두 개의 지역변수(영남과 호남)가 포함되었다.

이 표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개별선거구에서 투표율이 민주통합당의 득표율에 미친 영향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다. 이 표의 모델 1에서 투표율은 민주통합당의 득

15) 이들의 접근법을 따라 완전투표를 가정하고 투표자와 기권자들이 각각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하여 투표할 확률을 추정하면, 투표자들의 경우는 38.0퍼센트(새누리당은 42.9%)였으며, 기권자들의 경우에도 거의 변함 없이 38.0퍼센트(새누리당 38.9%)였다. 이때의 확률은 사이트린 외(Citrin et al. 2003, 80)를 따라 $P = \exp(X\beta) / 1 + \exp(X\beta)$ 로 계산하였다($X\beta$ 는 각 변수들의 값을 회귀계수로 곱한 총합; 회귀계수를 얻기 위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에는 새누리당 친근감, 이명박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1~4), 이념적 보수성(0~10), 연령, 월소득수준, 대재학력, 호남, 영남 등의 독립변수들이 포함됨).

〈표 3〉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투표율과 정당득표율

변수	민주통합당	
	모델 1	모델 2
투표율	-0.66*** (0.16)	-0.52*** (0.17)
후보자 수	-3.01*** (0.51)	-2.90*** (0.53)
호남	10.66*** (1.97)	9.02*** (2.57)
영남	-17.12*** (1.61)	-17.12*** (1.63)
상수	93.47*** (8.77)	85.63*** (9.41)
사례수	209	194
R ²	0.55	0.5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p<0.01, ** p<0.05

자료 출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a)

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투표율이 10퍼센트 증가할 경우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6.6퍼센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통합당의 득표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과 대립하는 것이다.

모델 1에 통제변수로 포함된 후보자의 수는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했던 것처럼 후보자가 많을수록 표가 분산되어 민주통합당이 얻을 수 있는 표는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호남과 영남 등의 지역변수들도 예상했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호남의 선거구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하는 반면, 영남의 선거구에서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의 후보가 모두 출마한 지역만을 고려한 모델 2에서도 투표율이 민주통합당의 득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가 약간 변화한 것을 제외하면, 분석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 또한 모델 1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3. 투표율과 당선율

〈표 4〉는 개별 선거구 단위에서 투표율이 민주통합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델 1은 민주통합당 혹은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모두 포함한 반면, 모델 2는 양당의 후보가 모두 출마하여 경합을 벌인 선거구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각 모델에는 투표율과 함께 통제변수로 두 개의 지역변수(영남과 호남)가 포함되었다.

이 표의 모델 1이 보여주듯이 민주통합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투표율과 부적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투표율이 낮을수록 민주통합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증가하였다. 민주통합당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호남 선거구에서 높은 반면, 영남 선거구에서는 낙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의 후보가 모두 출마한 경우만을 고려한 모델 2에서는 두 개의 지역변수들의 회귀계수가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분석결과가 모

〈표 4〉 투표율과 당선율

변수	민주통합당	
	모델 1	모델 2
투표율	-0.10** (0.04)	-0.10** (0.04)
호남	1.96*** (0.65)	1.41** (0.69)
영남	-2.96*** (0.63)	-2.93*** (0.63)
상수	5.91** (2.35)	5.51** (2.39)
LR chi ² (3)	72.25	56.68
Prob > chi ²	0	0
Pseudo R ²	0.2494	0.2113
Loglikelihood	-108.72	-105.76
사례수	209	194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p<0.01, ** p<0.05

자료 출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a)

텔 1과 유사하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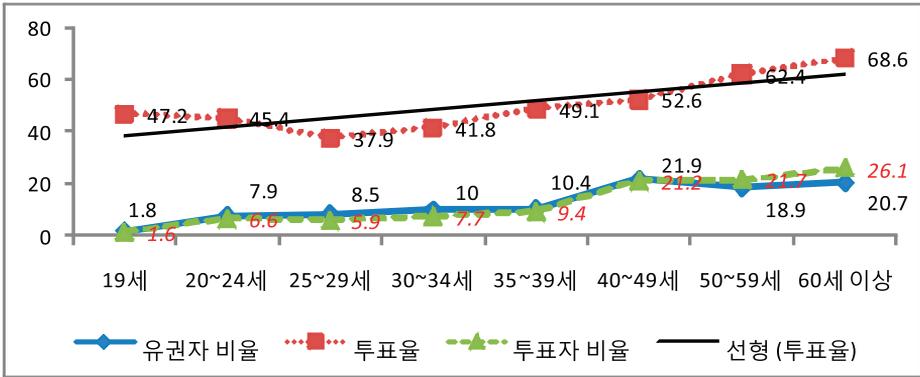
이처럼 개별선거구의 투표율이 민주통합당의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투표율의 정당편향론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들의 주장과 달리 민주통합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소위 ‘주변부 유권자’들의 정당선호가 핵심유권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선거 후 설문조사 분석에서 밝혀진 것처럼 투표의지가 약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유입된다고 해도 결국 민주통합당보다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고, 이들의 투표의지가 오히려 더 강하다는 점에서 투표율 상승이 민주통합당의 득표율이나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서 나타나는 투표율과 민주통합당의 득표율 및 당선가능성 사이의 부적관계는 허위적일 수 있다. 투표율 자체보다는 투표율과 밀접하게 연관된 선거구의 특성, 예를 들면, 선거구 내 유권자들의 연령구성 및 이념성향과 정당선호 등이 민주통합당의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4. 추가 논의: 선별적 투표율 상승과 정당득표율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명백히 투표율의 정당편향론과 대립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지층에 대한 특정정당의 투표동원전략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전반적인 투표율 상승 때문에 민주통합당 같은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 상승은 당연히 그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통합당이 젊은 연령층과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어 왔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분명히 나타났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12)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결과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함께 젊고 진보적인 유권자들로부터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2〉 참조). 반면, 새누리당은 이들에 비해 나이가 많고 보수적인 유권자들로

16) 1위와 2위 득표자들의 득표율 차이로 측정된 선거구별 경합도를 포함시키더라도 분석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료 출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b)

〈그림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연령대별 유권자 비율과 투표율, 그리고 투표자 비율

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이 연구가 주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당들의 동원전략에 따른 특정지지층의 투표율 상승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선거결과의 차이를 연령집단에 초점을 두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연령대별 유권자 비율과 투표율, 그리고 전체 투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¹⁷⁾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듯이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민주통합당에게 친화적인 40대 이하보다 새누리당에게 친화적인 50대 이상의 유권자들(39.6%)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았다.¹⁸⁾ 하지만, 각 연령대별 투표율의 차이 때문에 유권자 비율과 투표자 비율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투표자 비율(47.8%=21.7%+26.1%)은 유권자 비율(39.6%=18.9%+20.7%)보다 무려 8.2퍼센

17) 여기서 사용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만3470개 투표구(선거인 4018만1623명) 가운데 투표구 1410개(선거인 413만2112명, 전체 선거인의 10.3%)를 추출하여 산출한 성별과 연령별 투표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b, 7-9). 이 자료는 일부 연령구간의 유권자수와 투표율 자료만을 선거구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연령별 투표율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 가운데 하나이기에, 여기서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2012년 설문조사자료 대신 사용하였다.

18) 그 외에도 위의 그림에서 흥미로운 것은 연령대가 커질수록 투표율이 증가하는 추이가 지속되지만, 20대 전반과 20대 후반, 30대 전반과 30대 초반의 유권자들 사이에 현격한 투표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트가 더 높은 반면, 30대(17.1%=7.7%+9.4%)와 19세 포함 20대(14.1%=1.6%+6.6%+5.9%)의 투표자 비율은 각각 3.3퍼센트와 4.1퍼센트 낮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우 유권자 비율(18.5%=8.5%+10.0%)과 투표자 비율(13.6%=5.9%+7.7%)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연령대별 투표동원에서 발생한 차이가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지도가 높은 고령층에 대한 효과적인 투표동원이 이루어진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지도가 높은 젊은 연령층을 투표에 참여시키는 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최근 한국의 선거정치에서 심화되어온 소위 연령균열(age divide)을 구성하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유권자 사이에 엄존하는 정당선호의 차이를 감안할 때, 지지 연령대 동원의 차이는 새누리당의 선거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2012년 선거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투표한 이들은 각각 47.5퍼센트와 43.3퍼센트였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투표자들의 경우 양당에 투표한 이들은 각각 62.9퍼센트와 29.8퍼센트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연령대에서 실제 유권자 구성비보다 8.2퍼센트 더 높은 투표자 구성비가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50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 때문에 대략 2.7퍼센트($8.2 \times [62.9 - 29.8] / 100$) 정도 민주통합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높은 고령층의 투표율 상승만으로 상당한 수준의 득표율 제고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1위와 2위 사이의 득표율 차이가 2.5퍼센트 미만이었던 23개 정도의 선거구에서 진행되었던 선거경쟁의 향배를 결정할만한 위력적인 것이었다.

VI.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한국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사례로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 투표율의 정당편향이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투표율의 상승이 얼마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개인적 수준의 전국여론조사자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와 선거구 단위의 선거결과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a)를 이용하여 분석한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자뿐만 아니라 기권자 가운데 새

누리당을 선호하는 이들의 비율이 민주통합당을 선호하는 이들의 비율보다 높았다. 둘째, 기권자들 가운데 정당선호와 투표의무감의 수준 또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표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소한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 투표율의 정당편향성이 존재한다는 통상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투표율이 증가하면 민주통합당의 득표율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의 경험적 근거가 박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표율이 증가할 경우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낮은 투표율의 희생자라는 투표율의 정당편향에 대한 신화가 널리 수용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특정정당 지지층의 투표율 상승효과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율 상승효과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착시현상이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투표율 제고행위에 대한 계약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나타나는 투표율의 정당편향성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한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두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에 활용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설문조사자료의 경우 투표자의 비율이 실제 투표율에 비하여 무려 23.6퍼센트 더 높다. 비록 투표에 대한 과잉응답률의 문제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대부분의 분석에서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샘플링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이로부터 기인하는 분석결과에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둘째, 이 연구는 한국에서 투표율의 정당편향에 관한 시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연 투표율 상승이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만약 유리하다면 얼마나 그러한지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뚜렷한 경험적 근거 없이 널리 수용되어온 정당편향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2년 8월 30일

심사일 2012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20일

참고문헌

- 김욱. 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 조증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김재한. 2011.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18집 3호, 183-206.
- 김진하. 2008.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1집 1호, 5-29.
- 이갑윤. 2008.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26권, 93-116.
- 이현우. 2008. “투표율 변화와 유권자 선택: 1968-2000 미국대선을 대상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집 2호, 283-299.
- 이현우·전시홍. 2010. “설문조사의 투표율 과장 현상에 대한 연구: 거짓응답자 추출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6집 2호, 37-69.
- 장승진. 2012. “19대 총선의 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서울. 2월.
- 정일권·강상구·박수진·박천규·이수원. 2008.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본 투표율과 방송보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0호, 145-17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검색일: 2012. 10.1).
- _____. 2012b.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http://info.nec.go.kr>(검색일: 2012. 10.1).
- 황아란. 1997.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4호, 285-298.
- _____. 2011. “기초단체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 분석: 2010년 지방선거의 변화와 특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집 1호, 217-236.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2012.04).” <http://www.ksdcdb.kr/research.do>(공개예정).
- Bernhagen, Patrick and Michael Marsh. 2007. “The partisan Effects of Low Turnout: Analysing Vote Abstention as a Missing Data Problem.” *Electoral Studies* 26, 548-560.
- Blais, Andre. 2007. “Turnout in Elections.” In Russell Dalton and Hans-Dieter Klingem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Campbell, Angus. 1966. “Surge and Decline: A Study of Electoral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4, 397-418.
- Citrin, Jack, Eric Schickler, and John Sides. 2003. “What If Everyone Voted? Simulating the

- Impact of Increased Turnout in Senate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 No.1, 75-90.
- DeNardo, James. 1980. “Turnout and the Vote: The Joke’s on the Democra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No.2, 406-420.
- Eijk, Cees van der and Marcel van Egmond. 2007. “Political effects of low turnout in national and European elections Original Research Article.” *Electoral Studies* 26. No.3, 561-573.
- Erickson, Robert. 1995. “State Turnout and Presidential Voting: A Closer Look.”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3, 387-396.
- Gomez, Brad, Thomas Hansford, and George Krause. 2007. “The Republicans Should Pray for Rain: Weather, Turnout, and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69. No.3, 649-663.
- Hansford, Thomas and Brad Gomez. 2010. “Estimating the Electoral Effects of Voter Turnou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 No.2, 268-288.
- Holbrook, Allyson and Jon Krosnick. 2010. “Measuring Voter Turnout by Using the Randomized Response Technique: Evidence Calling into Question the Methods’ Validity.” *Public Opinion Quarterly* 74. No.2, 328-343.
- Kaufmann, Karen M., John R. Petrocik, and Daron R. Shaw. 2007. *Unconventional Wisdom: Facts and Myths about American Vo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nack, Stephen. 1994. “Does Rain Help the Republicans? Theory and Evidence on Turnout and the Vote.” *Public Choice* 79, 187-209.
- Martinez, Michael D. 2010. “Why is Turnout So Low, and Why Should We Care?” In Jan E. Leighley, ed. *The Oxford Handbook of American Elections and Political Behavior*, 107-12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ez, Michael D. and Jeff Gill. 2005. “The Effects of Turnout on Partisan Outcomes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1960-2000.” *Journal of Politics* 67. No.4, 1248-1274.
- Nagel, Jack and John McNulty. 1996.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Senatorial and Gubernator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 780-793.
- _____. 2000.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8, 408-429.
- Pacek, Alexander and Benjamin Radcliff. 1995. “Turnout and the Vote for Left-of-center Parties: A Cross-national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137-143.
- Shachar, Ron and Barry Nalebuff. 1999. “Follow the Leader: Theory and Evidence on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9, 525-547.

〈부록 1〉 주요 정당의 출마선거구 수, 득표율, 투표율(지역별)

지역	선거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투표율
		출마 선거구	득표율	출마 선거구	득표율	출마 선거구	득표율	출마 선거구	득표율	
서울	48	46	46.4	45	49.3	3	47.9	7	2.2	55.6
경기	52	52	46.0	45	49.6	7	34.5	4	1.9	52.5
인천	12	12	47.0	11	48.5	1	43.1	4	3.1	51.3
강원	9	9	52.8	8	41.8	1	8.7	1	3.4	55.9
대구	12	12	60.8	10	20.7	2	21.5	5	1.6	52.3
경북	15	15	60.8	11	13.0	5	13.4	1	0.7	57.4
경남	16	16	51.6	8	34.6	5	30.5	1	1.1	57.4
부산	18	18	49.6	16	39.1	2	39.0	1	0.8	54.5
울산	6	6	54.5	2	36.8	4	41.0	1	1.8	55.8
광주	8	2	21.2	6	62.0	7	23.8	1	1.1	52.9
전남	11	8	4.8	11	57.5	6	24.9	0	0.0	56.9
전북	11	7	11.7	11	50.9	5	22.2	2	2.1	55.0
대전	6	6	36.0	5	42.2	1	31.0	6	22.2	54.1
세종	1	1	13.9	1	47.9	0	0.0	1	33.8	59.2
충남	10	10	37.9	9	34.7	2	11.4	10	26.8	53.3
충북	8	8	49.8	7	43.3	1	30.7	4	7.2	55.0
제주	3	2	35.2	3	50.1	0	0.0	1	17.9	54.9
전체	246	230	45.61	209	44.17	52	27.94	50	10.77	54.5

자료 출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a)

〈부록 2〉 제19대 총선에서 후보결정요인(지역구)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모델 9	모델 10	모델 11	모델 12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이명박	-1.33*** (0.21)	-1.14*** (0.40)	-1.43*** (0.19)	-1.36*** (0.37)	-1.39*** (0.15)	-1.33*** (0.32)	-1.40*** (0.15)	-1.43*** (0.31)	-1.38*** (0.20)	-1.34*** (0.38)	-1.31*** (0.15)	-1.24*** (0.32)
정부 평가	-0.31*** (0.06)	-0.27** (0.13)	-0.35*** (0.06)	-0.40*** (0.12)					-0.33*** (0.06)	-0.36*** (0.12)		
이념	-0.15 (0.12)	-0.77*** (0.25)			-0.22*** (0.09)	-0.51*** (0.19)					-0.24*** (0.09)	-0.54*** (0.19)
연령	-0.1 (0.11)	-0.37 (0.23)					-0.06 (0.08)	-0.11 (0.17)	-0.09 (0.11)	-0.26 (0.21)	-0.08 (0.08)	-0.18 (0.18)
소득 수준	0.52* (0.31)	-0.98 (0.60)	0.66*** (0.25)	-0.72 (0.53)	0.29 (0.22)	-1.19** (0.50)	0.52** (0.22)	-0.39 (0.48)	0.68** (0.28)	-0.31 (0.57)	0.3 (0.24)	-0.89* (0.51)
대재 이상	2.79*** (0.81)	1.29 (1.32)	2.92*** (0.79)	1.45 (1.30)	3.09*** (0.75)	1.63 (1.27)	2.94*** (0.75)	1.4 (1.27)	2.74*** (0.80)	1.19 (1.31)	2.97*** (0.76)	1.47 (1.28)
호남 거주	-1.12*** (0.32)	-0.47 (0.56)	-0.90*** (0.29)	0 (0.52)	-1.15*** (0.23)	-0.22 (0.45)	-1.19*** (0.25)	-0.34 (0.46)	-1.07*** (0.32)	-0.34 (0.55)	-1.24*** (0.25)	-0.44 (0.47)
영남 거주	5.20*** (0.76)	5.93*** (1.37)	4.52*** (0.50)	2.74*** (0.85)	3.67*** (0.48)	2.74*** (0.92)	2.84*** (0.41)	1.04 (0.78)	4.65*** (0.62)	3.32*** (1.04)	3.82*** (0.57)	3.23*** (1.10)
사례수	451	451	520	520	692	692	609	609	451	451	609	609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새누리당에 대한 투표가 기본범주.

자료 출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ABSTRACT

Does High Voter Turnout Help the Democratic United Party? Partisan Bias of Voter Turnout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Byong-Kuen Jhee |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the partisan bias of voter turnout’ affects electoral outcomes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of Korea. It analyzes both the individual- and aggregate-level data to find that no significant partisan bias favorable to the Democratic United Party (DUP) exists. Instead, this study shows that the portion of pro-Saenuri Party (SNP) voters among non-voters is larger than that of pro-DUP, which is contrasting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high voter turnout helps the DUP. In addition, pro-SNP voters have stronger party closeness and obligation to vote than pro-DUP voters. Finally, it shows that SNP candidates rather than DUP candidates tend to gain more votes in those districts with high voter turnou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claims that the partisan bias of voter turnout seems to be only a myth in Korea, and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restrict any political activities to promote voter turnout.

Keywords: voter turnout, partisan bias, Democratic United Party, Saenuri Party, the 19th legislative election